

# “현장체험학습 사법적 책임 쿨레, 교육청이 분담하겠다”

천호성 교육감 예비후보, ‘교사 무한책임’ 구조 혁신  
전북체험교육센터 설립·전담 시스템 구축 공약 제시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교사 개인이 짊어져야 했던 과도한 사법적 책임의 쿨레를 교육청이 분담하겠다는 과격적인 공약이 나왔다. 천호성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는 교육부의 교원 면책권 강화 방침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전북 교육 현장의 ‘현장 체험학습 무한 책임 구조’를 전면 혁신하겠다고 29일 선언했다. 교사는 교육과정과 수업에만 전념하고, 안전과 행정은 교육청이 전담하는 이원화 체계를 가동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동안 교육계에서는 학생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가 고의·과실과 상관없이 이동학대 혐의나 형사 소속에 노출되는 구조가 체험활동 위축의 핵심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천 예비후보는 이러한 ‘사고 나면 교사 책임’이라는 해묵은 공식을 깨고 공적 책임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천 예비후보는 우선 ‘학교 안전사고 처리 특례제’ 도입을 약속했다. 고의나 중과실 없는 사고에 대해 교원의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법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조례 제정과 법률 지원 체계를 병행해 교사들의 사법적 부담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가칭 ‘전북체험교육센터’ 설립이다. 센터에 전문지도사를 배치해 현장 인솔과 응급 안전 관리를 전담하게 함으로써, 교사는 교육 설계에만 집중하도록 역할을

분리한다. 또한 업체 선정과 계약, 정산 등 복잡한 행정 절차를 센터에서 일괄 처리하는 원스톱 지원 체계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검증된 기관만 참여하는 ‘안전 인증제(S-Mark)’ 도입과 모든 학생·교사가 별도 절차 없이 보장받는 ‘통합 단체보험 자동 가입 체계’를 구축해 안전성을 촘촘하게 보강할 예정이다. 천호성 예비후보는 “체험학습 한 번에 수십 장의 서류를 준비하고 민원과 소송까지 감당해야 하는 현실이 교사들로 하여금 수업을 포기하게 만들고 있다”며 “교사가 안전해야 학생의 배움도 살아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교육청이 함께 책임지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할 때”라며 “전북에서 시작하는 이 변화를 대한민국 교육계의 새로운 표준으로 만들어, 선생님들이 당당하게 아이들과 교실 밖 세상을 만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오상근 기자

# “차기 전북교육 이끌 책임자... 공개 지지”

전북기총, 이남호 교육감 예비후보 지지 공식화  
천 후보 발언 논란에 긴급 임원총회 소집해 의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차기 전북교육감 선거에서 이남호 예비후보(사진)에 대한 지지를 공식화했다. 특히 상대 후보의 발언으로 불거진 ‘차기 교육’ 논란에 대해 직접 임원총회를 열어 입장을 명확히 정리했다. 전북기독교총연합회(이하 전북기총, 대표회장 고영완 목사)는 29일 공식 발표를 통해 “이남호 전북교육감 예비후보가 차기 전북교육을 이끌 책임자를 확인하고, 전북기총 명의의 공개 지지를 표명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8일 열린 긴급 임원총회를 통해 내려졌다. 전북기총은 최근 천호성 예비후보가 기자회견을 통해 “전북기총이 이남호 후보를 지지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대표회장의 의중을 오도했다는 논란이 일

자, 이를 바로잡기 위해 긴급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영완 대표회장은 “아이들에게 정직을 가르쳐야 할 교육감에게 도덕성은 무엇보다 중요한 기준”이라며 “청렴성과 학문적 정직성을 두루 갖춘 이남호 후보의 리더십이바로 교육 현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지지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우리 자녀들이 편향된 가치관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편적이고 건전한 윤리관을 지키게 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대표회장의 의중을 오도했다는 논란이 일

해 “모든 학생이 존중받는 차별 없는 교육 환경에는 동의하지만,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은 사안을 미성년자인 아이들의 학교 현장에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후보는 또한 “교육 현장은 특정 이념의 실험장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교육적 고민에 근거한 신중한 접근을 펼치거나 차별 불어넣는 것은 이념적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 측 선대위 관계자는 “이번 지지는 이번 선거의 핵심 가치가 ‘정직’에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며 “도민의 기대에 부응해 깨끗하고 신뢰받는 전북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원 출신의 이남호 예비후보는 서울대학교에서 학·석·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전북대학교 총장 거점급대 총장협의회 회장, 전북연구원 원장 등을 역임한 교육 및 행정 전문가다. /오상근 기자

## 전북교육청, ‘청렴도 1등급’ 달성 ‘고삐’

‘청렴 퍼실리테이터’ 활용 조직문화 개선 워크숍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내부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소통과 혁신을 통해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한 고삐를 죄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조직 내 수평적 의사소통과 민주적 의사결정을 촉진하기 위해 양상한 ‘청렴 퍼실리테이터’를 활용, 조직문화 개선 워크숍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지난 28일 2026년 청렴 퍼실리테이터 심화과정을 연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 2024년 전국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21명의 청렴 퍼실리테이터를 양성한 전북교육청은 매년 ‘찾아가는 조직문화 개선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 이 워크숍은 외부 강사가 일반적으로 강의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관 구성원들이 스스로 조직 내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 과제를 도출하는 참여형으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제도 도입 3년 차를 맞은 올해는 가장 큰 변화를 맞는다. 그동안 외부 강사에 의존했던 부분에서 탈피해, 내부에서 양성된 퍼실리테이터들로 워크숍을 운영할 수 있을 만큼 역량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우리 교육청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직원들이 직접 촉진자(퍼실리

테이터) 역할을 수행하며 현장 맞춤형 솔루션을 이끌어낼 전망이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지난 28일 2026년 청렴 퍼실리테이터 심화과정을 열고 실행 역량을 다졌다. 연수에서는 전문 역량 심화는 물론, 지난해 실행 결과 분석과 신청 기관별 맞춤형 워크숍 설계 등 실무적인 실습이 심도 있게 이뤄졌다. 심화과정을 수료한 18명의 퍼실리테이터는 3개 팀으로 나뉘어 활동한다. 이들은 오는 5월 18일부터 7월 말까지 워크숍을 신청한 18개 기

관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함께 만드는 청렴’을 주제로 변화를 이끌어갈 예정이다. 이홍열 감사관은 “청렴 퍼실리테이터 제도가 3년 차에 접어들며 이제는 내부 직원들이 주 강사로 나선 실 만큼 전문성이 성장했다”며 “구성원들이 주도하는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소통 문화가 현장에 깊이 뿌리내려, 궁극적으로 내부청렴도 1등급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전교조 전북지부 등 4개 교원단체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 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교원 5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했다.

## 전북 교원들 “교권 침해·학교 소멸위기 심각”

기자회견서 설문조사 결과 공개 발표... 전북교육 방향 제시 위해 설문 진행  
행정 부담·인사제도·미래교육 방향까지 문제 제기... 교육감 후보에 제안

전북 지역 교원들이 교권 침해와 교육활동 보호 문제를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으며 교육 정책 전반의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전북지부 등 4개 교원단체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 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교원 5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전북 교육의 주요 현안으로 ‘교육활동 보호 및 교권 침해 문제’가 57.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학생 생활지도 및 정서·행동 문제 대응의 어려움, 교원 행정업무 과중·인사제도 혼란, 학교 소멸 위기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교육활동 보호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58.7%로 높게 나타나 현장 체감도가 낮았다고 확인됐다.

교사들은 민원 대응을 직접 감당해야 하는 구조, 아동학대 신고 부담, 생활지도 갈등 증가 등을 주요 어려움으로 지적했다. 교육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행정업무 과중(76.2%), 안전사고 및 분쟁 우려(60.1%), 실적 중심 정책 추진(49.6%) 등이 부담 요인으로 꼽혔다. 교사들은 기존 업무에 더해 정책 사업이 계속 추가되며 업무 부담이 누적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인사제도에 대한 불신도 드러났다. “공정하고 합리적이다”는 응답은 18.5%에 그친 반면 부정적 응답은 44.5%에 달했다.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기피 현상 심화와 함께, 승진·가산점 제도 변화로 도시 학교 선호가 증가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학교 소멸 위기에 대한 체감도 역시 높았다. 응답자의 85.9%가 이를 체감

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주요 원인으로 학생 수 감소와 지역 인구 유출이 압도적으로 꼽혔다. 미래 교육 정책과 관련하여서는 AI·디지털 중심 정책에 대한 부정 인식(38.9%)이 긍정 인식(22.9%)보다 높게 나타났다. 교사들은 디지털 기기 활용이 교육 본질보다 앞서서 경향과 실적 중심 운영에 대한 부담을 지적했다. 청렴도에 대해서는 긍정 인식이 증가했지만, 인사 운영의 공정성과 책임성 부족 등 제도 신뢰 확보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단체 관계자는 “이번 설문은 현장 교원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전북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원탁토론을 통해 구체적인 정책 과제를 정리해 교육감 후보에게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 전북기총 “체험학습 축소, 교사 책임 전가 구조부터 바꿔야”

“현장 방치 아닌 제도 개선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단체총연합회(전북기총)가 학교 현장체험학습 축소를 둘러싼 정부 인식과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전북기총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현장체험학습 축소를 두고 “구더기 무서워 장독 없애는 격”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교사의 태도로 환원한 부적절한 인식”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 단체는 현장체험학습이 위축되는 근본 원인으로 ‘사고 발생 시 책임이 교사 개인에게 집중되는 구조’를 지적했다. 교사들이 우려하는 것은 체험학

습 자체가 아니라 사고 이후 민원, 감사, 징계, 형사 책임까지 감당해야 하는 현실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책임 구조는 그대로 둔 채 인력 보강이나 비용 지원만 강조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며 “법적 보호 장치 없이 교사에게 현장을 맡기는 현재 구조에서는 체험학습 정상화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장관의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전북기총은 “교육행정 책임자는 현장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제도 개선을 이끌어야 함에도, 대통령 발언에 동조하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이는 현장 대면 역할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전북기총은 △교사를 ‘회피’로 몰아

가는 발언 중단 △사고 발생 시 책임 기준 명확화 △현장체험학습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감사·징계·납부 방지 기준 마련 등을 정부와 교육부에 요구했다. 특히 법률 지원과 민원 대응 사고 처리, 심리 지원 등을 포함한 상시 지원체계 구축과 함께, 교사에게 가해지는 이른바 ‘2차 압박’을 막기 위한 국가 차원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기총 관계자는 “현장체험학습은 학생들에게 중요한 교육 기회”라며 “교사를 압박하는 방식이 아니라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 중증장애인 생생품 구매 전북교육청 ‘전국 3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중증장애인 생생품 우선구매 실적에서 전국 3위를 기록하며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앞장서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5년 중증장애인생생품 우선구매 실적에서 구매비율 2.21%를 달성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3위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실적은 법정 의무구매 비율인 1.1%를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지난해 1.06%에서 1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에 따라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와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구매계획 단계에서부터 중증장애인생생품 여부를 우선 검토하고 인체물과 공급자제, 사무용품 등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왔다. 또한 실수요 기반 구매를 연계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형성에 힘써왔다. /오상근 기자

## 사관학교 입시전략, 한자리서 듣는다

전북교육청, 내달 2일 육해공군·국간사 4개교 공동 설명회

장교의 꿈을 키우는 전북 지역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 육·해·공군 및 국군간호사관학교가 한자리에 모인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5월 2일 도교육청 창조나래 시청각실과 회의실에서 학생·학부모·교사를 대상으로 2027학년도 사관학교 입시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사관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들에게 체계적이고 정확한 입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해군·육군·국군간호·공군사관학교 등 4개 특수대학이 모두 참여한다. 각 사관학교 입학 관계자들은 학교별로 약 40분간 2026학년도 입시 결과를 분석하고 2027학년도 입학전형의 핵심 포인트를 직접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설명회 종료 후에는 학교별 개별 상담 부스를 운영해 맞춤형 진학설계가 필요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심층적인 상담 서비스를 지원한다. /오상근 기자

학교별 설명회 일정은 △해군사관학교(오후 1시 10~50분) △육군사관학교(오후 1시 50분~2시 30분) △국군간호사관학교(오후 2시 40분~3시 20분) △공군사관학교(오후 3시 20분~4시) 순으로 진행된다.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당일 현장 접수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사관학교는 특수목적대학으로서 일반 대학과는 전형 방식 및 준비 과정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이번 설명회는 수험생들이 느끼는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구체적인 합격 전략을 수립하는 데 실질적인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은이 도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은 “사관학교 진학을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 수집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라며 “이번 공동 설명회와 1대1 상담 상담이 우리 지역 학생들이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대입 지원 전략을 수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